

## 연성 노동정치의 주목할 성과

장 흥 근\*

종래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왔다. 하지만 근래 디지털 대전환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 하에서 사회적 연대와 대화를 골간으로 하는 연성 노동정치(soft labor politics)가 활성화되고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합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 〈사례 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했다. 2020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은 서곡이었다. 본격적인 협상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4월부터 시작되었다. 경사노위 밖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꾸려졌고 6월 말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지 못했고 합의 결과는 경사노위로 넘어갔다. 7월 28일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협약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1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2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3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4장)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사례 2〉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업종별 의제별 대화체들이 중요한 합의들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2020. 4)을 도출했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IT, SW 개발 분야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2020. 5). <관광서비스산업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관광산업의 위기를 노사정이 함께 극복하기 위해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2020. 8).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분과위원회>는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 남용을 방지하는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changhg@kli.re.kr).

데 합의하였다(2020. 9).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노선버스 노동자의 근무체계를 격일근무제에서 1일 2교대제로 개편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은 합의를 발표하였다(2020. 10).

#### 〈사례 3〉

경사노위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틀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플랫폼 배달 노동 문제의 현안을 풀기 위해 노와 사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그것이다. 이 포럼은 2020년 4월 1일 출범했는데, 플랫폼 배달업 노동조합(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과 사용자(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6개월간 5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간사회의를 거쳐 마침내 2020년 10월 6일 6차 전체회의에서 ‘플랫폼 경제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 협약 - 배달서비스업을 중심으로’이 체결되었다. 협약은 플랫폼 배달 노동 노사간의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후속 과제 등을 담았다.

#### 〈사례 4〉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고 하는 성과를 낳았다(2021. 1. 8). 이 법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할 형사처벌과 손해보상 비용을 크게 높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에 투자할 유인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다단계 하청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는 중대재해의 빈발이라는 현실에 대한 절박한 인식,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입법청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호응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화 경로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례 5〉

택배기사의 잇단 과로사로 촉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주목할 만한 합의를 발표하였다(2021. 1. 21). 2020년 12월 출범한 이 사회적 합의기구는 약 한 달 반 만에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주된 내용은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업계 사용자가 부담하고, 택배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이 사례는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라는 현실과 이의 해결을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연대와 압박,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사회적 대화 개입전략이 어우러지면서 성공한 것으로 ‘정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들은 대안적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립과 투쟁의 한 켠에

사회적 연대와 대화, 합의의 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일조한 것도 사실이고,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장악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풀려고 했고 진지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앞으로도 대화와 합의의 노동정치를 기다리는 현안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의 시행에 따른 대책, 외국인노동자 보호, ILO 기본협약의 비준 등이다.

이번 호 『노동리뷰』 특집은 ‘2020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1년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금속산업, 건설산업, 방송산업, 금융산업 등의 산업별 노사관계와 공무원 노사관계, 플랫폼 노사관계 등 직종 및 부문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특집이 우리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이해하고 노동체제 발전을 위한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